

# 정운천 “탄소법 오늘 국회 통과 유력”

새누리당 정운천 새누리당 국회의원 당선인(전주출)은 “탄소법(탄소소재 융복합 기술 개발 및 기초조성지원에 관한 법률)이 19일 본회의에서 통과가 유력하다”고 했다.

정 당선인은 18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부처가 이전과는 달리 전북현안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돌아섰다”고 강조했다.

정 당선인은 “지난 17일 정진석 원내대표와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를 만나 탄소법 통과와 당위성을 설명했고, 두 분으로부터 ‘전북 발전을 위해 조건 없이 탄소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며

## “정진석 원내대표·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에게 약속 받아” 유일호 경제부총리에게 탄소 산단 예타 등 현안 지원 요청도

서 이렇게 주장했다. 정 당선인은 “김도읍 부대표가 처음에는 서비스법 연계를 언급하며 미온적으로 나왔으나 ‘정진석 원내대표와 김광림 정책위의장으로부터 OK 사인을 받아오면 돕겠다’고 해서 정 원내대표는 직접 만나고, 김 의장과는 전화를 통해 OK를 받아왔다”고 말했다. 정 당선인은 또 유일호 경제부총리를 만

나 ▲탄소섬유 국가산업단지 조성 예비타당성 평가 통과 ▲지덕산권 힐링거점 조성사업 국비 전액 지원 ▲새만금 수목원 조기 착공 등 전북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는 활동도 소개했다. 정 당선인은 “전주에서 32년 만에, 전북에서 20년 만에 새누리당 당선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청와대와 정부부처 등에서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지

고 있다”면서 “확실히 작년과는 온도 차가 있다”고 했다. 자신이 위원으로 내정돼 있는 비대위 파행에 대해서는 “최고위든, 비대위든 어떤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저를 뽑아준 것은 전북 발전을 위한 준엄한 명령이라는 것으로 알고 그 일에만 전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가장 시급한 전북현안으로 ‘탄소법’이 꼽히고 있다. 전북도와 전주시가 탄소산업을 3대 핵심 성장동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탄소법이 국회를 통과되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광영 기자

### 송성환 의원, 전주지법 1일 명예민원실장

전북도의회 송성환 의원(전주3)은 18일 전주지방법원에서 1일 명예민원실장으로 위촉돼 근무했다. 송 의원은 이날 민원이 가장 많은 오후 2시부터 법원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상담과 안내 서비스를 실시했다. 송 의원은 “법원의 민원 업무를 직접 체험함으로써 법원 사무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도민의 눈높이에서 민원행정의 문제점과 개선책이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고 전했다. 또한 송 의원은 “법원이 보다 쉽고 편리한 사법서비스를 제공해 도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법원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신광영 기자



### 손학규 “새판짜기 앞장”

손학규 전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18일 자신이 주장한 ‘새판짜기’를 위해 나서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사실상의 정계 복귀 선언이다.

손 전 고문은 이날 광주 북구 한 식당에서 싱크탱크 ‘동아시아미래재단’ 관계자와 지지자 등 500여명을 만나 “이번 총선의 결과를 깊이 새기고 국민들의 분노와 좌절을 제대로 안아서 ‘새 판’을 짜는데 앞장서 나가겠다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다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손 전 고문의 ‘새판짜기론’은 지난 1월 제기된 바 있지만 구체적 움직임은 없었다.

그러나 이날 광주에서는 뉴앙스가 달랐다. “새판 짜기에 앞장서겠다”는 말은 비웃혔으나 발언 횡수나 강도는 그 때와 현격한 차이가 있었다. 더구나 손 전 대표가 과거와 달리 입을 위한 행진곡 문제 등 현안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적극 피력하기 시작했다는 점과 정계 복귀 여부의 질문에도 적극 부인하지 않았다는 점도 그의 정계 복귀 압박설에 힘을 실어 준다.

실제로 이날 오찬 회동에서 지지자들은 “손학규 대통령”, “손학규를 모시자!”를 연호하며 손 전 고문의 정계 복귀 기대감을 나타냈다.

손 전 고문은 이 같은 발언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예서 부인하거나 만류하지도 않았다. 회동 뒤 새판을 짜는데 앞장서겠다는 의미가 무엇이라는 지지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났다.

정치권에서는 손 전 고문의 정계 복귀가 이뤄질 경우, 단순히 더민주 복당이나 국민의당으로 입당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손 전 고문이 정계에 복귀할 경우 그의 역할은 야권통합의 중심에서 거나, 기존 여당에서 분파돼 나오는 세력을 아우르는 또다른 제3의 정치세력을 만드는 것이 될 것이라 관측이 나온다. 또 정의와 국회의장이 추진하는 ‘새한국의 비전’과의 연계 가능성을 점치는 이들도 있다. /이성주 기자



도의회 문건위 현장점검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는 18일 제332회 임시회 기간 중 임실 계곡~신덕간 국지도 확포장 공사 현장 방문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날 문건위원들은 공사 현장에서 책임감리원으로부터 계곡~신덕간 국지도 확포장 공사 사업개요 및 추진상황, 공사 현장에 반영된 교량, 터널, 사면공법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중요·대형공사의 시공 과정에서 안전·품질 확보 중요성을 강조했다.

## 청와대, 3당 협치한다더니 興하고도 담 쌓나

### ‘임행진곡’으로 野와 거리감 이어 비박과도 불통... 현기환 정무수석, 정진석 보고도 외면

청와대가 웬지 거꾸로 가는 분위기다. 박근혜 대통령이 총선 이후 “민의를 3당 구조에 있다”고 강조하면서 3당 원내대표를 불러 협치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실제 벌어지는 행태는 이와 정반대로 가고 있다. 오히려 불통 정체가 심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박 대통령은 3당 원내대표 회동 이후 야권에서 요구한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기념곡 지정 및 제창 허용 여부에 대해 “보훈처에 검토 지시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답했다. 그러나 보훈처의 결론은 현행 유지였다.

청와대는 “주무 부처인 보훈처가 결정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이를 온전히 믿기는 어렵다. 박 대통령이 제창 쪽에 무게를 두었다면 이같은 결정이 내려지기 어려웠을 것이고, 설령 보훈처가 독단적으로 그와 같이 정했다 해도 재검토 지시를 내

릴 여지도 있었다. 이 때문에 호남 민심은 물론, 야권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이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야기대로 “협치가 끝난 것은 아니더라도 금이 간 것” 만큼은 부인하기 어렵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임행이 아니다. 새누리당은 전남 전국위원회를 개최해 혁신위와 비대위 추인을 하려고 했지만 친박의 조직적 반발로 회의 자체를 열지도 못했다. 친박이 주도했는지, 배후에 청와대가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자연스레 발생한 일로 치부하기 어렵다.

실제 이날 정진석 원내대표와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이 광주로 가는 KTX열차에

서 바로 앞뒤자리에 앉아 2시간가량 한 공간에 있었지만 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협치의 기본은 청와대와 여당이고, 이를 토대로 야당과 대화를 하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야당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13일 회동에서 특유의 ‘벌렁 개그’까지 동원하며 분위기를 이끌었지만 정작 현실은 청와대 정무수석이 집권 여당 원내대표와 냉랭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뿐이다. 여기 에다 광주 5·18 기념식장에서 정 원내대표는 황교안 총리와 조우했으나 역시 별 다른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

현재 새누리당에서는 전남 전국위 무산과 관련해 친박과 비박이 서로에게 총부리를 겨누고 있다. 그러나 이를 조정해야 할 책임이 있는 청와대는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외면하는 것으로 답을 대신했다. /이성주 기자

### 안철수 “새누리당과 연정 없다”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18일 광주지역 언론사대표들과의 조찬간담회에서 “새누리당과의 연정은 없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안 대표는 이날 국민의당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는 새누리당과의 연정론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말하고 “새누리당에서 (일부 세력) 쫓겨나오면 받아들일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선에서 안 대표가 새누리당 후보로 나선 것이라는 ‘설’에 대한 질문에 “새누리당은 절대 안간다. 비호남에서 의견을 확장하고 있다”며 새누리당 후보설을 일축했다.

안 대표는 또 “국회의원이 돼 국회에 가면서 느꼈던 것은 국회는 급한 것만 처리하고 장기적인 과제는 방치한다”면서 “6월부터 매주 오전 7시 30분부터 20회동안 의부감사를 초청해 소속의원들이 공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한달전 총선에서 광주·전남 지역민이 큰 격려의 선물을 준 게 아니라 숙제를 준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개혁 세력을 모아 정권교체, 국민의 삶을 바꿀 수 있도록 미래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주 기자

### 도의회 교육위, 도교육청 김규태 부교육감 상대 교육현안 정책질의

## 누리에산 중기지방재정계획 포함·진로직업 정책 개발 등 주문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8일 전북교육청 김규태 부교육감을 상대로 도내 교육현안에 대해 정책질의를 진행했다.

황현(익산3) 의원은 최근 불거진 생활화학물질이 포함된 상품이 학교에서 사용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황 의원은 “학생 건강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친환경제품으로 교체하는 등 학생 건강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구했다. 정호영(김제1) 의원은 지방재정법과 시행령에서 누리과정예산 전체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예산을 추가해야 함에도 법을 어겨가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웠다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교육의 요람인 유치원은 보편적인 교육 프로그램 구성이 우선이므로 시설사업보다 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이 필요하다”고 했다.

장명식(고창2) 의원은 도교육청 수장이 학교폭력 미기재에 따른 책임을 지겠다고 공언했으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진행형인 것에 대해 마련을 주문했다.

장 의원은 “도교육청의 지시에 충실히 따랐던 교장들의 불이익을 받고 있어, 사기가 떨어진 이들을 위해 교육청학회의 방향 전환과 수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혜숙(전주5)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모든 학생들이 자신들의 재능과 끼, 특성을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이어 공공육아 담아내지 못한 아이들은 대안교육과 전환학년제, 교과과정선택제 등을 통해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인정(군산3) 의원은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상 어린이

집 지원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만큼 관련 법률 개정을 위해 도교육청이 노력하면서 보육현장의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주문했다.

최 의원은 “청소년들이 꿈을 향해 옳은 방향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진로직업 정책을 개발하고 제안된 정책 과제를 도교육청 차원에서 적극 반영해 추진하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양용모(전주8) 위원장은 “누리과정은 보육과 교육을 통합한 무상교육과정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인 공약사항이며 현 정부의 핵심정책”이라며 “누리과정 대안은 현 정부가 예산을 국고에서 지원하지 않고 교육청에 일방적으로 부담을 떠넘김으로써 계속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해 의회와 교육청 간 토론이 필요하다”고 했다. /신광영 기자

### 도의회, 상임위별 추경 심사 본격

전북도의회가 17일 본회의를 열고 15일 간 제333회 임시회를 갖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계류의안 등에 대해 심사한다.

특히 18일부터는 전북도가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별 심사와 계수조정예 착수하고 오는 3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계획이다.

먼저 환경복지위원회는 17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보건환경연구원과 새만금추진지원단, 18일 환경복지국 및 복지여성보건의료추진사업심사, 19일은 새만금 동서2축 사업지역을 방문할 예정이다.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복지여성보건의료 예산예산 1조 3,100억 466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35% 증액됐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3.28% 증액된 1조 6,013억 5,901만 4,000원이다.

환경복지국 예산예산은 1,970억 3,808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76% 증가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0.97% 증가된 2,268억 5,450만 2,000원으로 증액 편성됐다.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강병진)도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했다.

도 농축수산식품국은 제1회 추경예산에서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6,167억원 대비 4.6% 증액된 6,452억원을, 세출예산에는 기정예산 7,349억원 대비 4.0% 증액된 7,646억원을 편성했다. /신광영 기자

### 도의회 행자위, 추경 예산안 심사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8일, 제332회 임시회에서 기획관리실,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양성빈 위원장(장수)은 “도 세입의 대부분이 의존재원으로 전라북도의 재정자립도는 전국적으로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지속적인 재정자립도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강용구 의원(남원2)은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와 도민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은 예산 심사 시에 7,000만원이 삭감된 사업인데, 이후 계약 체결 낱알 잔액도 7,000만원에 달한다. 당초 사업비가 과도하게 편성된 사례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통해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종철 의원(전주7)은 “전북연구원 별관 재건축에 18억원을 편성했는데, 리모델링이 아닌 신축을 해야 하는 필요성이 부족하고 재건축 사무실 용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송성환 의원(전주3)은 “예산 편성 후 5개월이 지나지 않아 당초 예산에서 1억원 이상 잔액 삭감된 사업이 다수 발생했다.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성과 반복하지 않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송지용 의원(완주1)은 “퇴직예정공무원 해외연수는 일선에서 도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후생복지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상반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추진하는 만큼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최영규 의원(익산4)은 “글로벌리더 과정의 위탁교육비는 교육과정 신설에 따라 부득이 추경에 반영된 예산인데, 향후 예산 편성 시 교육과정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필요하다면 미리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허남주 의원(비례)은 “매년 발생하는 도비 반환금 수입이 이번에도 110억 가량 되는데, 면밀하지 못한 사업검토와 예산집행 관리 부실로 발생하는 만큼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부분 외에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줄여나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광영 기자

### 김용태, 성경 인용 친박계 ‘악’으로 규정

새누리당 혁신위원장으로 내정됐던 비박계 김용태 의원은 18일 친박계를 ‘악(惡)’으로 규정하며 맹비난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성경 시편 1장 1-6절을 올리며 자신의 심정을 우회적으로 표출했다.

김 의원은 “악인은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다”고 덧붙였다. 친박계를 사실상 ‘악’으로 규정한 셈이다. /이성주 기자